

< 2015년 9월 17일 매일건설신문 >

도로공사, 예산절감이 창조경제? 시설물진단업체들 부실 안전진단 우려

기사입력(2015-09-17 15:32)



한국도로공사가 대가의 17% 수준의 금액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면서 한국시설물안전진단업체들이 단단히 뿔났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17일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본사 앞에서 '저가발주 반대! 부실 안전진단 저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법하며 밀어붙이기식 저가발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비추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소요비용인 200억을 70%인 140억 원으로 삭감해 예산 편성하고 이마저도 35억 원으로 발주하는 등 예산 줄이기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대상시설물 안전진단에 1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통본부장이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재난안전처 담당자가 뇌물수수로 구속 처벌받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라 직접 발주를 하지 못하고 계약업무를 조달청장에게 2년간 위임할 수밖에 없어 지난 6월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지만 예산 축소로 반려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을 늘려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임하는 대신 각 지역본부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 계약업무를 이관하는 편법으로 계약을 발주했으며, 발주부서와 예산 삭감 규모를 결정하면서 법정 진단시기를 놓치고 과업기간을 100일 이내로 정해 부실 진단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도로공사의 경우 준공예정인 30일 이전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과업기간은 60일도 안된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관계자는 "처음 책정된 예산은 157억 원으로 축소된 현재 예산은 40억 원 정도된다"고 전하면서 "금액이 조정된 것은 예전에 획일적으로 구조물 상태에 상관없이 똑같은 정밀 안전진단비용을 지불했으며 보수비용 보다 진단비용이 더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짧은 공기로 부실 진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우선적으로 용역당 구조물 대상이 30% 줄어 무리가 없고 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입찰참여 결과를 보더라도 예전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도공의 행태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시설안전진단업계 도공 규탄대회 열어

진단 정밀 예산 2백억 원 중 35억 원만 집행해 물의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의 2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입찰을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7일과 8일 양

일간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저가발주 반대! 부실 안전진단 저지를 위한 한국도로공사 규탄대회'를 열고 성토의 날을 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시특법에 의거해 5년에 1회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도

록 강제하고 진단 대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저가발주에 의한 부실 진단을 엄격히 금지하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저가발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용역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예산 2백억 원을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으로 35억 원만 발주해 부실진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협회와 업계는 도로공사의 정밀안전진단 저가발주 공고부터 수차례 저가발주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입찰 중지를 요청하고 국토부를 통해 도로공사에 입찰 중지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노력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공사 시설물은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약의 사고가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어,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393명의 연명으로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이어서 한국도로공사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영도 기자

